

당정, 주요 입법 온도차... 엇박인가 전략적 분담인가

이 대통령, 與 검찰·언론 개혁 등 속도전에 갈등 완화 주문 정청래 대표 “내란 정당 해산” 강경에도 여야 대표 회동 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한 달 동안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현안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무리한 속도’에 따른 당정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해석과 같거나 엇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정 대표는 3일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해산’ 강공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정 대표는 “만약 추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백번, 천번, 만번 해산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 동조 세력을 끊지 못하는 한 내란 옹호 세력 오명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후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자며 제한한 회동은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 전제돼야 회동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맞물려 여야 대치 정국이 오히려 격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소통을 하고 있으나,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경우 국민의힘과의 접촉이 끊겨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이런 대야(對野) 기조 속에도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절대다수 의석의 ‘강자’인 민주당이 야당에 너무 세게 해선 안 된다며 갈등 완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궂장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대표가 이 대통령의 중재 아래 형식적으로나마 ‘손을 맞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사과·반성이 없는데 먼저 대화는 어렵다”며 “경색된 정국에 대통령실이 중재 역할을 자임한 셈이라 당이 (회동 성사를 위해)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요 개혁 입법을 두고도 당정 간 온도 차는 여러 차례 노출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처의 부처 배속 문제 등 검찰 개혁안 각론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장인 민형배 의원의 의원 발의안에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민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불으며 ‘명청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입법 속도와 관련해서도 엇박자가 노출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를 ‘3일 의원총회-4일 공청회-5일 정부조직법 발의-25일 본회의 처리’라고 발표했다가 약 1시간 후 법안 발의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정정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실에서 당 초 발표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이 언론개혁으로 추진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굉장히 신중하고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받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내란특별법)까지도 당정 간 다른 의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보이자 민주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기도 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모두 “이견이 없다”, “불협화음이 아닌 미세조정 과정” 등이라며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엔 자칫 당정 간 엇박자로 비칠 경우 여권의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정이 소위 ‘굿잡·배드잡’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 시선도 있다.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진영까지 깨안으려면 여러 의견을 두루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당정이 역할을 나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확장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친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정부-대통령실 이 나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의 폭을 넓혀주는 면도 있다”며 “워낙 많은 의원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정이 다를 게 없다. 정 대표 체제가 별다른 문제 없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힘, 내란 반성 없는 ‘적반하장 투쟁’

특검 수사 물리적 저지·고발... 법사위 안건 상정엔 집단 반발

특검 수사를 내세운 여권의 ‘내란 종식’ 드라이브에 수세적 상황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이 반전을 도모하며 대야 투쟁 수위를 부쩍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특검 수사에 맞서 물리적 저지와 함께 고발 수순에 돌입했고, 특검법 개정안을 다루는 법사위 현장에선 안건 상정에 집단 반발하는 등 ‘강한 야당’으로 변모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진행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의 탈을 쓴 정치 강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비난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경호·조지연 의원실에 이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말살 수사’로 규정하고 맹비난한 것이다.

전날 의원들은 압수수색 현장으로 달려가 집회를 저지했다. 더 나아가 특검을 정면 겨냥한 법적 대응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 특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한층 격해졌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의 야당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내

정, 정면 승부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전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거부하자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고성으로 설전을 벌이며 안건 거부를 성토했던 추 의원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장의 여론전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위원장은 스스로 의회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 독재이며 민주당 독재의 서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응에는 특검과 여당의 일방적 공세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단 일대일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투쟁 방식이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압수수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대회를 통해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여객선 공영제는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책무”

서삼석,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항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6M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